

기고

정영균

전남도의원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구조의 격변 속에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국가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지방을 떠나는가? 그 답은 바로 '교육'에 있다.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갈망하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자녀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한다. 교육은 단순한 진학 문제를 넘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서울 강남이 교육도시로 성장한 역사적 배경이 이를 잘 보여준다. 국공립 명문학교의 집중 이전을 계기로 교육 인프라가 집중됐고, 이는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교육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모으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

기고

박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



“일손 부족해 농사 포기!”

이 말은 소식이 아닌, 얼마전 보도된 신문 기사 제목이다. 인구 5200만 명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농업의 중심지인 전남 무안군에서 하루 1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해 양파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 인구가 1만3485명이 나 줄었다. 이는 구례군 전체 인구의 5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2년마다 한 개 군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농촌의 문제로만 보아선 안 된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책 설계와 집행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 지방의 현실과 목소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국 3특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취재수첩

경고등 켜진 지역 고용시장

송대웅

경제부 차장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보면, 광주·전남지역의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9000명 줄어들며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전통적인 업종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고, 전남은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의 위축이 전체 고용 감소에 직격탄을 쏘았다.

지역일자 수도 심각지 않다.

광주와 전남 모두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며 지역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장기화되는 고용난 속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능한 정부'를 약속했다.

이제 그 말이 정책으로 실현돼야 할 때다. 고용문제는 민생의 최전선이다.

지방소멸의 해법, 교육에서 찾다

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 역시 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지난 3월 31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 도의원, 순천대 교수진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범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예비교사 양성 체계 개선, 교육 실습 인프라 확충, 지역 정주의식 제고 등 교육생태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 폭넓게 논의됐다.

순천대 사범대학은 지난 40여 년간 전남 동부권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아직까지 부속중학교가 없어, 예비교사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교육 실습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예비교사 양성이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큰 제약 을 주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실습 매칭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기준 순천대 교육실습생의 77%가 순천·여수·광양 지역에, 14%는 전남·광주 타 지역에, 나머지는 기타 지역에 분산 배치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실습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습 관리와 효과적인 피드백 체계 마련에도 한계를 가져온다.

인구감소·지역소멸 위기 정부 결단 필요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초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로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유류부지 개발, 도심 공공주택 확대 등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공급 공약도 병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 의지를 희석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현재의 정책은 수도권 위주이며 획일적 기준에 따라 운영돼 인구가 감소중인 지방에는 실용성이 부족하다.

실제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은 행복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고, 14개 군 지역은 전세·매입임대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없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에선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라는 말처럼 공염불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청년을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보증금 無, 월세 1만원)' 같은 혁신적인 주거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입주자 선정 기준을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의 창의적 시도가 법령에 막히는 구조다.

더욱이 2028년부터 전면 시행될 '학교현장실습학기제'는 기존의 단기 실습 방식에서 벗어나 한 학기 동안 정기적인 실습을 요구하게 된다.

예비교사가 일주일에 2일 이상 실습학교에 직접 나가 수업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와 접근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실습의 거점이 될 부속중학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러한 당위성은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고등교육법 제45조는 “사범대학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부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 조항이다. 부속중학교 설립은 이제 법률의 실행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법적 책무에 따라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대학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예비교사 양성과 지역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핵심적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도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도의회 역시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요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은 지방소멸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며, 순천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일 것 것이다.

이제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은 단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인구감소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이 문장 하나로 지방의 주거정책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주거 기반이 조성되면, 청년은 돌아오고 기업은 살아나며, 지역은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 지방정부에 책임을 주되, 권한도 주는 것이 지역소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처럼,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수요 대응이 아니라 국가 백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 희망이 쏠린다.

국가의 뿌리는 지방이다. 그 뿌리가 마르면 줄기와 잎도 시들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그 뿌리를 살리는 정책적 결단과 입법의 묘수가 필요한 때다.

정부가 지방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사람이 모이는 대한민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이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독자투고

‘불법 렌터카 대여’ 대책 마련해야

최근 SNS상에서 미성년자 등 제3자를 통해 렌터카를 대여하는 불법 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불법 렌터카 계약은 미성년자 등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겨 사망사고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성년자 (19세 미만) 무면허 운전사고 등의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처럼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SNS상에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도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게시글이 난무하면서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앱에서는 무면허나 미성년자도 공유 렌터카를 빌릴 수 있다는 글이 수시로 게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등의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에서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자와 불법으로 제3자가 대여해주는 업체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인증제도가 강화되면서 미성년자 등 무면허 운전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로서는 과거 이력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재명 고용경찰서 대서파출소장

OPINION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사설

광주시내버스 파업 더 이상 안된다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일, 그리고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시내버스 운행률이 60%대로 폭 떨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후 지난 13일 가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의 사후 조정마저 결렬됐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이견을 절충하는 조정 절차다.

그동안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고수했던 사측은 이 자리에서 2.5%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측도 기본급 8.2% 인상 주장에서 물러나 5%인상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중재에 나선 지노위가 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2차 사후 조정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상 노사의 대화가 끊겨 또 다시 언제 협상이 진행될 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파업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내버스 운행률 또한 급감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비상수송대책과 사측의 계약직 직원 투입 등으로, 70~80%선을 유지했던 시내버스 운행률은 대체투입 인력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13일부터 운행률이 61.9% (97개 노선·619대)로 폭 떨어졌다.

16일부터 파업 전 102개 노선, 1000대가 운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여서 이래 저래 시내버스 이용객들만 불편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대시민 호소문까지 내며 노사 양측의 통근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시장은 이날 호소문에서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는 6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하고, 4차례에 걸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은 더 큰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 주시고 시민 앞에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불모로 한 시내버스 파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노사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전남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되길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눈에 띈다. 이는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양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대형 민간배달앱의 지나친 수수료와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광주시가 지난 2021년 7월 도입한 ‘위대프로’는 6.8~12.5% 수준인 민간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2%까지 낮춘데다 지역 화폐를 온라인 결제로까지 연계해 앱 이용률이 높을수록 수수료 절감분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맹겨요’는 가맹점 중개수수료 2%,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가능 도입, 사장님 지원금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광주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다.

실제로 도입초기인 2021년 1240곳이었던 가맹점 수는 현재 1만4499곳으로 11배 급증했고 누적 주문 건수는 169만건, 누적 매출액은 418억 7000만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현재 지역 시장 점유율은 17%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2022년 7월 도입한 ‘먹깨비’도 1.5%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비 없이 가맹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에 힘입어 지난 3월 기준 가맹점 1만2790개소, 회원 13만2212명, 매출액 360여원을 돌파했다.

2023년 12월 도입한 ‘맹겨요’도 1년 3개월 만(지난 3월 기준)에 누적 가맹점 4018개소, 회원수 7만1724명, 매출액 50여억원을 달성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이 이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가짜 경쟁력 부족’ 등으로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 플랫폼을 상대하기 버거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공공앱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와 가맹점 가격 할인 동참 등이 절실하다고 한다. 지역민들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의 착한 소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